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형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기상조의 나라

시기상조라는 말은 듣기에 착잡하다.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되 실행은 나중에 미루자는 뜻이다. ‘미루고 싶다’고 느끼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을 것이다. 그 계획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일이 정말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조건이 무르익는 때를 기다려야지, 선불리 밀어붙였다가 일을 그르치기라도 하면 그 실패의 충격이 재기의 기회마저 앗아갈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이 말은 옳다. 문제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사실은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끔 전자의 흉내를 내며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일종의 ‘시기상조 리스트’가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는 시기상조다, 일본문화 개방은 시기상조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시기상조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시기상조다, 공교육 현장에서의 체벌 금지는 시기상조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의 현대사’를 서술해 볼 수 있을 정도다. 그중에는 이제 시행된 것도 있고, 아직도 ‘시기가 상조하여’ 여전히 제자리인 것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수도 없이 많으며 놀랍게도 그 나라들은 망하지 않았다. 최근 한 성소수자 군인이 영외에서 합의를 행한 성행위를 군 당국이 문제 삼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에서 풀려났다. 이제 성소수자 군인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처벌받고 가도 처벌받는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호모포비아들은 차치하고, 적지 않은 이들이 ‘안타깝지만 아직은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시기상조 리스트는 또 한 줄 늘었다. 세계 최강 군인 미군은 군인의 성적 정체

성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도 가하지 않으며 동성애자인 장성까지 있는데 왜 우리는 시기상조인가. 동성애자들에게도 국민성이 있어서 우월한 미국은 왜 열등한 한국인은 안 되는 것인가.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이다. 서구사회가 동성애는 ‘질환’이 아니며 따라서 ‘치료’의 대상도 아니라는 과학적 진실도 대한민국의 몇몇 목회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주주를 퍼부으며 월급을 받아 간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도 감히 하기 힘든 사랑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지난 대선 토론회 때 논란이 된 동성 결혼 합법화 문제 역시 그렇다. 한국성소수자 연구회(중)에서 제작한 자료집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영국·미국·프랑스·아르헨티나를 포함한 23개국이며, 시민 결합 제도를 통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까지 합하면 총 44개국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은 왜 이 같은 관용과 성숙의 지표에서는 44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나라여야 할까.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물질적 진보 말고 정신적 진보의 수준을 보여 주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세계 순위 하위권에 속한다. 그 처지를 벗어나는 일도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어슐러 린의 유명한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의 전반부는 미래 세계의 어느 작은 나라 ‘오멜라스’가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돼 있다. 그러나 그 전반부는 후반부의 끔찍한 진실과 대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오멜라스의 어느 지하실에는 아무 죄도 없는 한 아이가 짐승처럼 묶인 채 굶주림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왜 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아이 하나가 그런 고통을 받아야만 오멜라스의 그 풍요로운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비열한 사회적 계약을 알고도 우리는 계속 이 오멜라스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종교칼럼



원목 선덕사 주지

사드 갈등, 생명가치로 점검하자

가뭇마음이 길어지면서 강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었다. 한때 넘실대던 강물은 이윽고 작은 시냇물처럼 변했다. 강을 국경으로 한 두 마을의 농부들은 속이 탔다. 농토에 제대로 물을 대지 못하여 농사를 망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이른 아침에 강으로 나가 펄이 물길을 만들었다. 두 마을의 농부들은 조금이라도 더 물을 끌어오려고 물길을 더 깊이 파다. 어느날 한 농부가 물을 대기 위해 강에 나갔다가 건너편 마을에서 깊이 물길을 파서 물이 모두 그 마을 농지로 가는 것을 봤다. 화가 난 농부는 때마침 물을 보기 위해 강에 온 건너마을 농부에게 욕을 내뱉었다. 그러자 건너마을 농부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욕을 했다.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은 이웃 농부들이 강으로 달려갔다. 두 농부가 물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고 농부들은 서로 자기 마을 농부를 편들면서 건넌마을 농부들을 욕하고 비난했다. 화가 난 한 농부가 흙덩이를 던지자 농부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펄이와 낫과 몽둥이를 들었다. 강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은 호민관은 상부에 알리는 한편 지역수비대를 급히 소집해 강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두 나라의 군대가 시냇물이 된 강을 사이에 두고 창과 칼을 겨누었다. 2600여 년 전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지 만, 우리 자신이나 이웃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작은 갈등이 심각한 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다. 석가모니는 그 소식을 듣고 강으로 달려가서 두 나라의 군대가 서로 창과 칼을 겨누는 강 가운데로 나아갔다. “장군이며, 호민관이며, 그대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원수처럼 노려보면서 창과 칼을 겨누고 있습니까?” “뱀다시여, 오랜 가뭄에 물이 말랐습니다. 농지에 물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와 평화 이루어졌

는가? 상황은 정반대다. 맞은 사람은 무기를 들고 다시 반격하고, 그렇게 싸움은 깊어진다. 힘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 그 자체가 불의인데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지겠는가. 법규경(法句經)은 전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가라앉지 않고, 다름은 다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승리한 자는 열광하지만 패배한 자는 원한으로 잠잠지 못한 다’고. 인정과 존중, 화해와 용서가 원한을 풀고 다툼을 그치게 하여 평화를 여는 길이 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거대한 국가차원의 일에서도 이 원리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는 길이다’라고 했고, 티벳 한 스님은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생명가치에 맞게 불가침 평화협정, 비핵화 합의, 재래식 무기 감축 등 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서 사드가 필요 없게 하면 어떻게, 실상 우리에겐 그다지 쓸모 있는 물건도 아님에랴.

기고



임미향 호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조사관리팀장

통계조사는 지역의 기초자산

최근 주말에 집 주변 대형 마트를 찾았다. 한 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느끼고 함께 다 보려면 한나절이 모자랄 정도로 다양하게 전시된 상품들에 피곤함을 느끼는 하루였다. 이렇게 일회용 젓가락부터 식자재, 의약품, TV, 그리고 식탁까지 소비자가 상품 구입을 모두 한 곳에서 마치는 구매행동 ‘원스톱 쇼핑’은 어느새 우리들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바쁜 현대인들은 한 장소에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자하는 니즈(needs)를 표현했고 공급자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판매점을 점점 대형화

했다. ‘라이프스타일 제안형’의 원스톱 쇼핑을 증대함으로써 이에 화답했다. 원스톱 쇼핑, 원스톱 플레이, 원스톱 라이프 등 다양한 ‘원스톱’ 신조어 속에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써 7회째를 맞는 통계청 주관 ‘2016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화답은 ‘원스톱 서베이(One-Stop Survey)’다. 통계청에서는 기존 조사별로 시기를 각각 달리 할 경우 2종 이상의 조사가 해당되는 중복사업체에게는 각 조사별 조사에 응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응답부담이 따르므로, 이를 최소화하고자 조사원 1인이 방문하여 모든 조사를 완료하는 ‘원스톱 서베이’를 실시하여 조사내용 및 통계지원 공무를 통한 통계조사 효율성과 통계 간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업체에서 희망하면 편리한 시간대에 조사가 응하도록 인터넷조사를 이달 14일~30일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사업체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기업활동조사, 소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포함), 운수업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 등 서로 다른 시기에 업무별로 조사해왔던 연간조사 5종에 대하여, 2009년부터 동일시기에 조사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로 통합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계는 산업의 구조분석, 국민소득 추계,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35일간 실시하며, 표본 추출된 전국 3십 8만여 개의 사업체가 대상이다. 호남 및 제주지역(광주·전남·전북·제주)은 그 중 약 10%를 차지하며, 3만 7000여개의 사업체 규모다.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관할 지역 조사를 위해 조사인력 3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그 중 현장조사는 250여 명의 임시 조사원을 채용해 담당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2017년 11월 ~ 12월 사이에 업무별로 공표한다. 개개인뿐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 연구기관 등의 수요자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된 모습을 조사하여 만들어진 통계를 통해 국가와 더불어 개개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또는 의사결정을 만들도록 잘못된 통계자료 생산은 곧, 국가 정책 또는 개인들의 의사결정 방향을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통계 자료의 정확성은 응답한 국민과 각 개인들의 신뢰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번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참여하는 국민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 응답으로 경제 산업구조를 제대로 나타내는 통계자료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최근 들어 개인이나 기업정보에 대한 비밀이 보다 강화되어 어느 때 보다도 열악해진 통계조사 환경 속에 일하는 조사 직원들을 배려하여, 성실히 ‘2016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응답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통계청 역시 정확하고 편리한 원스톱 서베이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社說

논밭도 농심도 타들어 가는데 비는 언제 오나

논밭이 타들어 가고 있다. 농심도 타들어 가고 있다. 가뭄이 심각하다. 40년 만의 가뭄이었다는 2015년보다도 심한 듯싶다. 농민들은 바짝 말라 가는 농작물을 보면서 애를 태운다. 올해 전남 지역 강수량은 5월 말 현재 154mm로 평년의 36% 수준에 불과해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수율은 61.3%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6월 말까지 큰 비가 없을 경우 우 내륙지역으로 가뭄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 도내 해안지역에서는 벌써 가뭄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섬으로 구성된 신안의 경우는 더 심하다. 마늘·양파·고추·대파 등 3691만㎡의 밭에서 잎마름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마늘은 잎이 마르자 곧바로 마늘 주머니들이 서둘러 수확에 들어갔다. 양파는 물을 뿌리다가 간신히 버티고 있다. 무안군도 이미 모내기를 끝낸 논의 3분의 1 정도가 가뭄 피해 의심 지역으로 분류됐다. 간척지 논 30만㎡는 이미

염해를 입거나 말라죽었다.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모내기 이양도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가뭄이 앞으로 몇 달 사이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6월은 물론 7월에도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올해는 장마도 8월이나 돼야 소식이 있을 것 같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 뒤 첫 번째 민생 행보로 가뭄 피해 현황을 둘러봤다. 정부는 이제 수자원 이용 계획도 전면적으로 다시 짜는 등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세워야 한다. 4대강 보의 방류 계획도 가뭄 극복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21개 시·군에 가뭄 대책비 15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했으며, 이에 앞서 가뭄 극복을 위한 국비 81억 원을 긴급 지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정부와 지자체가 단연히 해야 할 일이다.

‘따뜻한 보훈’ 내걸고 확 달라진 보훈처

새 정부 출범 후 광주민주화운동 지원 등 전향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보훈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는 14년 동안 동결됐던 5·18기념사업 예산에서 감지된다. 5·18 3단체가 지난 2003년 연 2억3000만 원의 기념사업 예산이 2016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최소한 200%는 인상해 줘야 한다고 요청하자 보훈처가 긍정적 답변을 보내는 것이다. 보훈처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9일 관련 단체에 보내왔다고 한다. 국가보훈처는 또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따뜻한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직접 유공자를 찾아가거나 초청해 위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편협한 안보관 주입 등 논란을 부른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보훈

청도 이전까지는 지역 정서와 배치되는 5·18 기념식 문제 등으로 부담을 느껴 왔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새로운 보훈처장을 맞으면서 활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전임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 당시 5·18 홀대, 보수 이념 편향 논란의 중심에 섰던 보훈처의 변화가 반갑다. 그동안 보수 정권의 입맛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업적이 속개 왜곡·폐쇄되어 왔기 때문이다. 박 전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등을 비롯한 각종 사안에서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그러나 피우진 처장 취임 이후 국가보훈처가 구태를 벗고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그 유족과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기대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보훈

無 等 鼓

“난민센터에 가 보면 음식 나눠 주는 곳이 아니라 스마트폰 충전기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취약할수록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리더는 스마트폰을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안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지난달 말 ‘2017 서울국제문화포럼’에 참석한 인도 작가 아미타브 고시(61)가 한 말이다. 사회인류학 박사이기도 한 고시의 지적에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녹아들어 있다. ‘네트워크’는 소통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에서 ‘소통’이아말로 가난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보 또는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기회’로 보는 시각은 기존에 확립된 각종 이론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도시생태학자 버제스(Ernest W. Burgess)가 도시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동심원 이론’이 좋은 사례다. 지난 1925년대 미국의 시카고를 모델로 삼은 이 이론은 하나의 도시가 중심 지역에서부터 외부로 확

스마트폰

거주하는 통근자 지대는 도시의 가장 외곽에 형성된다는 점이다. 버제스는 그 이유에 대해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중심 업무지역 바로 인근에 거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기에, 저소득층이 일자리 확보 기회를 더 많이 더 빠르게 공박기 위해 일터 근처에 함께 모여 사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학자의 고찰은 비록 90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소통-네트워크는 정보이자 기회’라는 대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셈이다.

/홍형기 사회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7-9500)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